



보도 일시	2023. 1. 19.(목) 16:30 (행사 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3. 1. 19.(목) 13:0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영곤 (02-3778-3440)
<총괄>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과	담당자	사 무 관 정구영 (02-3778-3442)
			전문위원 정명철 (02-3778-3560)

의료취약 지역 완화, 필수의료 확보위해 의료체계 규제 혁신

- 한덕수 총리, 지역의료원에서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9일(목)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관계기관) 국립중앙의료원장(주영수), 인천광역시의료원장(조승연)
△(대학)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정재훈)
△(지자체) 인천광역시장(유정복),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김찬진)
△(정부) 보건복지부 2차관(박민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정원),
교육부 차관보(나주범),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등

○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의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3개 분야 7개 세부과제).

<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 >

분야	세부 과제(안)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2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 마련
보건의료 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4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5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6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2022년 8월 출범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영곤 (02-3778-3440)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구영 (02-3778-3442)
			전문위원	정명철 (02-3778-3560)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성경은 (044-202-2435)
	공공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박동희 (044-202-2532)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2-2732)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2-2691)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민병성 (044-203-6945)

< 붙임 > 의료체계 규제혁신과제 세부 내용



1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현행

저출산·고령화 등 의료이용량 변화에도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정원은 전문의 수급상황, 수련환경 등에 대한 고려없이 배정

개선

- ①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책정
- ②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련

2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마련

현행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자격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전담간호사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개선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별 자체 지침 형태로 운영토록 하고, 자율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현행

국립대병원에 소속되어 소속병원·지방의료원 등의 필수 의료 및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여 '22년부터 운영중

개선

제도도입 초기인점을 고려하여 추후성과평가 등을 거쳐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4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현행

수련병원 대다수가 대형병원(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임에 따라, 수련 중 경험하는 환자군이 고난이도·중증으로 제한되며, 지역사회·공공 임상 경험 부족

개선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 마련,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5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현행 「2020 전국 의사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은 52.5%로 나타남

* 대한의사협회에서 조사 실시 (응답자 6,507명)

개선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연계방안 마련

6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현행 의료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심화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의료기반 취약 취약지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추진

7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현행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행위 기반 보상,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지급되어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소

개선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하여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